

## 2001년 전자산업 통상환경 전망(II)

- 본회 국제통상팀 -

### 5. 2001년 미국 통상환경 전망

#### 【2001년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

부시 대통령의 통상정책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다. 다음은 본회 미주고문변호사인 Kaye Scholer의 소속 로펌인 Kaye Scholer사가 부시대통령 및 주변 인사, 부시가 최근 임명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내놓은 2001년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이다.

이 분석자료는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민주당의 역할, 대선에서의 근소한 표차 승리의 영향, 상하원에서의 세력균형 등 기타 요인들도 고려하고 있다.

#### 1)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 개관

##### A. 부시의 통상정책은 대선 후 이해집단의 압력과 각료들의 특성에 따라 결정될 예정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에 이어, 부시가 임명한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국방부, 농무부, 교육부, 자원부 장관들을 인준하기 위해 1월 20일 상원이 소집되었다. USTR 대표 인준은 2월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대통령은 그가 잘 아는 측근인사와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경험 많은 전문가 그룹을 가지고 있지만, 대선에서의 신승 및 이 과정에서의 전례 없는 막대한 정치자금 모금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현실과 국내업계의 압력으로 인해 자유무역 정신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부시 행정부는 모든 정책이 2002년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인데, 중간선거는 역사적으로 집권당이 패배하였었다.

상무장관, 국무장관 및 재무장관은 공화, 민주 양당에서 존경받는 인사들이며 USTR 지명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통상정책에서의 역할 확대를 표명해왔다.

상무부는 전통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해왔기 때문에 상무부의 권한 확대는 외국수출자들에게 유리한 점도 불리한 점이 공존할 것이며, 국무부와 재무부가 활발한 활동을 재개하면 긍정적인 진전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국 무부와 재무부는 통상문제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상무부와 USTR 이 이를 대신하였다. 이는 통상문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의 이해집단은 그들에게 가용한 채널에 제한되었다는 그들을 대변할 채널확보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B. 무역확대 및 신속처리권(Fast Track) : 최우선 과제

부시대통령이 집권초기에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할 여러 징후가 있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과 싱가포르 및 칠레와의 양자간 협정의 체결이 될 것이다.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은 라틴아

메리카가 새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점을 표명해왔다. 특히 멕시코가 긍정적으로 부각될 것이다(부시의 최초 외국방문은 멕시코로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의 만남이 될 것임).

무역확대를 추구의 진실성은 부시가 올해 신속처리권의 획득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공언에도 나타난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파적인 차이를 접어두고 노동 및 환경조건에 합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신속처리권을 허용할지의 여부는 행정부가 어떻게 기타 통상 우선과제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초당파적 협력정신”이 근년 통상분야에 나타나, 보호를 모색하는 미국업체에 대한 양당이 모두 지지하였다. 의회 개최 초부터 양당 모두는 2002년 총선에서의 잠재적 승리에 집중할 것이다.

약 50년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집권하지 못한 채 상원이나 하원의석중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2002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통적인 이익단체들에 호소하려는 강한 유혹이 양당에 가해질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주의자로 비추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그러한 정략에 대해서는 참을성이 없기 때문이다.

신속처리권 법안의 노동 및 환

경조건에 대한 민주당의 관심에 부시 행정부가 반응을 나타낸다면, 클린턴 행정부가 이루지 못한 신속처리 협상권을 의회의 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집권 초의 중요한 승리가 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민주당내의 노동 및 환경 중시자들의 정치적 지원으로 인해 까다로운 조건에 고집하는 등 비타협적이었기 때문에 공화당 온건파들의 표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Barshefsky 대사는 궁극적으로 신속처리협상권은 의회가 반대한다면 “불필요”하다라는 공개적 입장을 취했다.

사실, 신속처리권 의 통과 실패는 클린턴 행정부의 특징뿐만 아니라 고위 통상관계자들의 권위 결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Barshefsky는 존경받았지만, 정치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

클린턴 행정부 이전에는 신속처리 협상권은 도쿄라운드에서 시작된 이래 예외 없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다.

### C. USTR의 역할 및 내각내에서의 위치

Dick Cheney 부통령이나 Colin Powell 국무장관 같은 내각내의 핵심 멤버의 강한 국방경력을 고려할때 국가안보 문제가 통상 문제에 앞서는 부시행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미치는 체니 부통령의 영향력은 클린턴 대통령하의 고어 부통령의 역할을 능가할 것이다.

공화당 내부 관계자들은 “부시가 들을 마지막 목소리”로 묘사하면서 체니 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부요 결정에 가장 중요한 조언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TR을 장관급으로 유지하고 Robert Zoellick을 대사로 임명한 결정은 통상정책에 국가안보 측면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다.

Zoellick 대사의 지명전에는 부시행정부가 USTR을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차관급으로 격하한다는 루머가 새어 나왔다. 이 아이디어의 출처는 그녀의 역할은 통상까지 포함시키려는 Rice 국가안보보좌관에서 비롯된 듯하다.

이는 원래 80년 대 중반 레이건 시대에 상무성 관리들이 제안한 조직개편안의 변형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USTR을 격하하려는 시도는 과거에 같은 노력이 실패한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실패한 듯하다. USTR은 법에 따라 상원 재정위원회와 하원 세수위원회에 보고한다.

따라서 두 위원회가 관여하여 USTR이 장관급으로 유지하게 작용한 듯하다. 결과적으로 Zoellick은 대사 자리를 수락하였다(만약 차관급이었다면 수락치 않았을 것이다).

D. 국내정책이 행정부의

대외의제를 그늘지게 할 듯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향후 1~2년간 통상정책에 헌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부시가 발표한 초기 우선순위는 교육개혁, 보건 정책(health care initiative), 감세 등 국내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경제가 크게 하락하면 의심의 여지없이 이것이 부시행정부의 주관심사가 될 것이다.

2) 부시행정부의 경제각료 지명자

부시 대통령의 경제각료 지명자들은 노련한 업계 지도자들(상무장관 Don Evans, 재무장관 Paul O'Neill), 존경받는 협상가(USTR 지명자 Robert Zoellick) 및 높은 평판의 경제학자(백악관 수석경제보좌관 Laurence Lindsey) 등이다.

부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그와 밀접한 개인적 인간관계를 지닌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듯 하기 때문에, 이들 경제각료들이 새 행정부에서 중대한 권위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A. 상무장관 Don Evans

부시와 오랜 밀접한 개인적 유대를 지니고 있는 에반스는(그는

부시의 “또 다른 나(alter ego)”로 묘사되며 25년간 부시와 친구사이다) 성공적인 정유업계 기업가이며 노력에 의한 엔지니어이다.

에반스의 공직경험은 당시 부시 주 지사가 임명하여 텍사스대학 리젠트 감독위원회에서 무보수직을 맡은 게 전부이다. 에반스는 근년에 많은 상무장관들이 그랬듯이 부시측의 선거대책위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부시의 정치자금 모금 총책이었다.

조만간 임명될 국제무역차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을 감독하는 수입행정차관보 등 상무부의 요직인사가 흥미로울 것이다.

국제무역차관보로는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시절에 이 자리에 재임한 바 있는 Roger Wallace가 언급되고 있으며, 상무부 대표변호사(General Counsel of Commerce)로 Ted Kassinger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임명될 경우 Kassinger는 상무부에 처음 근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전에 상원 재정위원회의 다수통상변호사(Majority Trade Counsel)이었으며 이후 민간 통상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는 많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지각있고, 통상문제에 중도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Kassinger는 상무부 인수팀을 이끌고 있으며 차관급인k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Charles Grassley (공화당, 아이오와) 상원의원의 보좌관이었던

Jim Yokum이 수입행정차관보의 물망에 오르고 있다.

◆ 에반스 인준 청문회

통상정책에 대한 에반스의 견해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부시 행정부에서 상무성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미국업계의 주요 주창자인 상무부는 전통적으로 美업계의 이익을 크게 보호해왔다.

임명 직후, 에반스는 자유기업(free enterprise)의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1월 4일의 인준청문회에서 상원의원 Ernest F. Hollings (민주당, 사우스캐롤리나)와 John D. Rockefeller(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에 의해 몇 번이고 “미국업계의 증진”의 의미에 대해 추궁당했으며, 미국경제에서 산업 및 제조기반에 대한 공헌을 질문당하였다.

에반스는 미국 경제의 이러한 산업 분야에 등 돌리지 않을 것이며 외국 철강회사에 대해 201조를 촉구하는 국내 철강업계를 “고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철강이 미국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는 철강업계의 주장에 동조한다.

이러한 발언이 철강에 대한 부시의 통상정책에 어떤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는 아직은 모른다. 미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한 “국가안보” 주장은 70년대 이후 광범

위하게 거부되어 오고 있는데, 재무부 장관인 O'Neil이 명백히 이에 반대한다. 그러나 중간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발언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수한 주장이 부시행정부에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에반스는 분명히 업계와의 자칭 “적극적인 대화”의 창을 열었으며 확실히 미업계의 주장자가 될 것인데, 이게 상무장관의 임무이다. 또한 그는 미국업계가 외국의 경쟁자들과 “공정히” 경쟁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표명하였다.

에반스가 독립적인 원유생산기업의 CEO이긴 하지만, 1999년 중반 원유 반덤핑 제소를 한 “국내 원유기업 보호(Save Domestic Oil, Inc.) 연합의 일원은 아니었다.

## B. USTR 지명자 Robert Zoellick

### a) Zoellick의 배경

USTR 지명자인 Robert Zoellick은 워싱턴에서 평판이 높다. 그는 부시대통령 시절 떠오르는 별로 국무부, 재무부 및 백악관에서 고위직을 차지하였다. 그는 지적 비중 뿐만 아니라 전 국무부 및 재무부 장관이었던 James A. Baker의 심복으로 베이커와 플로리다에서 대통령 선거 재검표 과정을 지휘하였다.

부시대통령의 아버지 집권시절

국무부의 경제 및 농무 차관으로서, NAFTA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시 수석 국무성 관리였다. 또한 991년 신속처리협상권에 대한 의회투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최근에는 투자회사인 골드만 삭스에서 수석국제자문관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연구교수, 워싱턴에 있는 German Marshall Fund에서 일하기도 했다.

Zoellick은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부시행정부가 대외의제와 무역정책의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행정부가 재임기간 대부분을 중대한 국내경제와 정치적 이슈로 보내야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Zoellick의 역할은 FTAA와 신속처리권의 성공에 필수적일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특히 신속처리협상권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Zoellick이 노동 및 환경조항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에 달려있다.

양당간의 의견차이는 1991년 Zoellick이 의회에서 신속처리권을 통과를 위해 일했을 때 더욱 벌어졌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문제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이견의 정도를 감지하고, 최근 부시의 대변인은 신속처리권이 4월의 미주정상회담에 맞게 제때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 b) 통상문제에 대한 Zoellick의 견해

Zoellick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부시대통령은 그와 Zoellick 모두 서방세계의 좋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웃들은 우리의 대외정책이나 경제정책의 뒤늦은 생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Zoellick은 하원의 금융위원회(House Committee on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에서 두 번 증언하였다. 그 자리에서 그는 공개무역제도를 주창하며 미국이 “무역장벽을 해소를 위해 G-7, WTO, APEC 등의 의제의 자유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Zoellick이 주창한 다른 정책은 WTO 다자논의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간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정책이 있는데, 그는 미국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경쟁적 동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견해는 무역 협상의 결과지향적 접근법을 나타내주는데, Foreign Affairs 2000년 1/2월호에서 “특정 지역의 시장 개방이 너무 지연되면, 미국은 다른 지역의 시장개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여러 연설과 투고에서 반복한 주제는 연합(coalitions)과 동맹(alliances)의 구축 및 교역상대

국가들이 “공정하게 각자의 책임의 몫을 지게”할 필요 등인데 특히 일본을 예로 들었다.

또한 Zoellick은 아시아 문제에서 커지는 인도의 중요성과 미국이 인도의 민주주의에 주목할 필요를 언급하였다.

금융문제에 대해 그는 IMF와 World Bank가 “투명하고, 온라인화 및 실시간 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이러한 기관의 역할을 축소하여 “채권국이나 채무국 또는 민간금융부분의 적절한 역할을 빼앗”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 현대전자 지원에 대한 Zoellick의 불만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 대외통상관련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현대전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정책과 철강 및 자동차교역의 불균형문제 등을 통상문제로 공식거론하고 나섰다.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Zoellick USTR 대표 지명자는 1월 30일 “현대 전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제조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국측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보조금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Zoellick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현대전자산업의 구제조치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해 앞으로 한국정부의 부

실기업정책을 문제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클린턴정부의 USTR 대표였던 바셰프스키가 퇴임직전에 자동차교역의 불균형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Zoellick 지명자가 현대전자문제에 대한 대응방침까지 언급해 미국의 대한통상정책이 앞으로 강경해질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Zoellick은 현대전자문제를 구조조정을 회피하려는 사례로 지목하면서 “(한국 정부는)구조조정을 받아내지 않고 금융지원을 해준 것은 WTO의 정부보조금규정에 입각해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내달 이임할 예정인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국대사도 지난 30일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차입금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에 은행지원이 계속되고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공정무역관행에 위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해 Zoellick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보스워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시장원칙에 근거한 투명한 경제를 만들지않으면 대가가 클 것이며 시장의 판단으로 기업 퇴출과 회생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 한국정부의 기업정책에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한국철강제품의 미국수출과 관련해서도 Zoellick은 “미국의 철강산업이 불공정(무역)거래에 직면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대처방 안을 찾

아 (미국)철강산업의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최근들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조치가 점증하고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철강마찰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한국내 전문가들은 “클린턴 행정부에선 미국경제가 호황을 누린 덕분에 대외 통상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반대 상황이 전개되고있다”면서 “특히 부시 행정부는 미국 전통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어 한미 통상마찰이 심해질 소지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C. 재무장관 Paul O'Neill

공화당 온건파이며 알루미늄 제조사인 ALCOA사의 전직 회장인 O'Neill은 오랫동안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일한 바 있다. 탁월한 기술과 평판을 지니고 있으며 전직 장관들과는 달리 월스트리트 경험은 없다.

양당 모두 그를 실용주의적 산업가로 존경한다. 철강노동자 연합(United Steelworkers)은 O'Neill의 임명을 반겼으며, 철강업계 경영진들은 금속업계 경험자가 핵심 부처에 임명된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알루미늄업계는 구조적으로 철강업계와는 틀리지만 이전의 성향을 보면 그가 철강업계의 보호

막은 되지 않을 성 싶다. 인준 청문회에서 O'Neill은 미국 의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 주장에 의존치 않을 것이며 국내 철 강업계의 문제점은 공급과잉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 D. 백악관 경제보좌관 Lawrence Lindsey

Lindsey 보좌관의 업무의 범위가 아직 명확히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임명은 보수적 경제 지지자들을 고무시킨다. 재무장관인 O'Neill이 재정 (finance) 분야에 깊은 배경이 없기 때문에 Lindsey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규모 감세정책, 사회보장제도의 손질 등 부시가 선호하는 Lindsey의 아이디어는 국내정책 문제로 감세정책은 2001년 부시 행정부의 제1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통상 및 금융문제에 있어서는 Lindsey는 미국의 對日관계 개선 및 IMF의 개혁 등을 내세운다.

#### 3) 2001 통상정책 의제

위에서 나타나듯이,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 우선순위는 이미 형태를 띠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양자 및 지역간 논의의 기존 의제에 따라 움직인다.

올해 통상문제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행

정부가 얼마나 통상문제에 정력을 투입하느냐에 따른 실제적인 진전이 얼마나 이루어 질 것인가는 두고 보아야 한다.

107차 의회는 아직 소집중이며 의회 의원들은 1월 첫 주에 선서를 하지만 하원은 1월 30일에 가서야 회기가 재개된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Dick Cheney 부통령이 선서할 때까지 1주일간만 다수를 차지하였고, 지금은 同數일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상원에서의 공화당의 다수를 확인할 수 있다.

통상 분야의 의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우선정책의 개요를 밝히기 시 작했으며 의회의 통상의제도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하원에서는, Bill Thomas(공화당, 캘리포니아)가 세수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이것이 위원회의 통상의제에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데, Thomas는 농업주 출신이며 농업부분의 통상문제에 특히 관심이 크다. Thomas는 위원회 의제의 대부분을 채우게 될 핵심 국내문제 때문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Phil Crane (공화당, 일리노이)은 통상소위원회(Trade Subcommittee)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통상소위의 민주당 고위인사인 Sander Levin(민주당, 미시간)은 소수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의사당의 통상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으

로 예상된다.

상원의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는 지난 11월의 위원장 선거 패배에 따라 이제 조직되고 있다.

1월 20일 의장에 취임한 Charles Grassley (공화당, 아이오와) 상원 의원은 통상 관련 담당관들을 임명하려 하고 있다.

양당의 고위인사들은 상원이 50대50으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 위원회 구성원, 담당직원 및 예산을 균등히 나눌 것을 동의하였으나, 상원의 권력구조가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위원회 선거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의견을 차지하게 된다.

107차 의회 재정위원회의 민주당 고위인사인 Max Baucus(민주당, 몬타나) 상원의원은 그의 우선정책을 밝혔는데, 여기에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양당간 합의의 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Baucus는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높일 의회통상사무소의 창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무역 적자검토위원회(US Trade Deficit Review Commission)가 이의 창설을 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이다.

또한 그는 한국과의 무역확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북한과의 교역, 쿠바에 대한 제재 철폐, 라

오스와 정상무역관계 허용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래의 항목은 2001년 행정부와 의회가 다룰 핵심 통상정책 이슈들이다.

#### A. EU와의 통상관계/WTO 분쟁

현재 새 행정부는 지난 몇 달간 EU와의 관계를 시험한 외국 판매법인(FSC, foreign sales corporations), 바나나 및 소고기 호르몬 건 등 WTO 분쟁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케이스들은 의회내에서 광범위한 논쟁을 야기시켜 이미 WTO 분쟁해 결제도의 개혁에 대해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WTO패널이 내린 불리한 판정에 불만인 미국 업체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원한다.

국내 철강업체가 고용한 법률대리인들은 패널 판정의 구속성을 제거하고 패널을 단순한 “자문이사회”로 격하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최근의 쟁점 케이스에서의 불리한 패널 판정에 자극받은 그들의 최근 전략은 패널이 이해당사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USTR이 패널의 사퇴를 요청하게끔 하는 것이다). 부시 아버지 집권시절의 Carla Hills USTR 대사가 관여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미국의 기본목표중 하나는 다른 나라들의 의무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분쟁해결 절차가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부시행정부가 국내 철강업계 법률대리인들의 주장에 동의할 것 같지는 않다.

#### B. WTO 협상

부시행정부는 클린턴행정부가 수행한 제한된 의제에서 벗어나서 WTO 협상에서의 미국의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다.

클린턴행정부가 추구한 기정의제(built-in agenda)는 단편적인 것으로 농업 및 서서비스 협상에만 집중된 것이었으며, 좀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신속처리협상권의 부재 및 모멘텀의 결여 때문이었는데, 이것이 클린턴행정부의 우선정책이 아니기도 하였다. 부시대통령은 미국이 소위 “단일한 착수(single-undertaking)”로 종합적으로 WTO 협상을 추구하여 농업 부문이 일괄 양허의 일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농업계는 유럽과 많은 개도국처럼 종합적인(comprehensive) 라운드가 이루어지도록 오랫동안 로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분야 협상의 진전에 매우 중요한 업계주도의 의제설정 없었다. Zoellick이 여러 기고문에서 밝혔듯이, 부시행정부가 다자간 논의에 대한 견제로써 지역 및 양자간 FTA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놀라울 것을 없을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아직 유보중이며, 행정부와 의회는 분명히 이 문제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농업부문이 가장 장애요인이 되는 듯 한데, Colin Powell 국무장관은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관여하나 합의치 못하는 부문에는 까다롭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한 클린턴 대통령과의 입장차이를 분명히 했다.

#### C.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는 4월에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되는 FTAA 정상 회담을 앞두고 이 FTAA 문제는 부시행정부가 다루어야 할 첫 번째 이슈중 하나이다.

부시는 멕시코와 밀접한 유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관심은 기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부시는 전임대통령들보다 FTAA 및 라틴 국가들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FTAA 초안이 오는 4월 부에노스아이레스 FTAA 각료회담시에 제출된다. 그러나 브라질 같은 교역상 대국은 부시대통령이 신속처리협상권을 의회로부터 득할 때 까지 FTAA 협상의 진전을 꺼려하고 있다. 세수위원회 무역소위(Ways and Means Committee Trade Subcommittee)는 이번 회기중에 FTAA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D.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부시행정부는 싱가포르 및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진행중인 협상을 물려받았다. 2001년말 APEC회의 이전에 싱가포르와의 FTA를 체결하라는 압력이 있고, 의회는 요르단과의 FTA를 검토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쟁점이 되는 노동 및 환경조건이 걸려 있다(부시행정부가 요르단과의 FTA를 다른 나라들과의 FTA의 모델로 삼을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원 세수위원회는 베트남과의 FTA체결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E. 신속처리협상권

FTAA 및 양자간 FTA 협상은 올해 초 신속처리협상권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킬 것이나, 행정부와 의회가 얼마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Barshefsky 대사 같은 민주당 인사들은 중국에 대한 항구적무역관계(PNTR)의 허용을 지적하는데, 클린턴행정부가 의회를 통한 신속처리협상권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편리성의 주장인 듯 하다. 클린턴행정부는 현상중인 교역상대국들에게 신속처리협상권의 부재의 경우 협상이 비생산적이라는 점을 인

정하기 싫어했다.

통상이슈에 관계된 민간부문의 대리인들은 PNTR법안에 추가적 조건이 부여받았다는 경험 때문에 신속처리권이 불필요 하다는 의견에는 반대한다. 신속처리권의 필요를 인정함으로써 부시행정부는 신뢰받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노동 및 환경문제가 신속처리권에 다루어져야 하며, PNTR에서의 여러 조건 및 CBI협정, 캄보디아 섬유협정, GSP 등에서의 노동 조항 등 그들이 성공한 사례를 들었다.

하원의 세수위원회 무역소위의 민주당 고위인사로 중국 PNTR의 조건설정에 핵심적이었던 인물인 Sander Levin(미 시간) 의원은 이 논쟁에서도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신속처리권에 노동 및 환경 조항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는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시행정부의 신속처리권 통과에 대한 의회내 타협능력의 여부가 통상분야의 주요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 F. 미국 통상법 개정

올해 제조업계에서 통상법 개정에 대한 압력이 가해질 것은 분명하다. 현존 미국법의 “엄격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상무장관 Evans와 재무장관 O'Neill의 인준

청문회에서도 거론되었다. 201조(세이프가드)의 “개정”의 지지자들은 “엄격한 적용”에 대해 법안을 다시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EC의 Wheat Gluten 케이스에 대한 최근의 WTO 항소기구의 판정이 이러한 노력에 기름을 붓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미한 역할을 한 소비자 단체들 또한 통상법안 논의에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공언했다.

버드법안(Byrd Amendment)의 부결은 자유무역 주창자들간에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핵심 의제이나,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버드법안은 세관이 징수한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를 제조업체에 배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하원의 주요 통상자문관들은 버드법안의 의결에 주저하고 있는데, 버드법안의 부결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아서 제조업체에 향후 통상법에 관여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 결국 버드법안의 부결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적인 전략은 미국의 교역상대국의 동법안에 대한 제조업계의 WTO 판정을 기다리는 것이다.

#### G. 안데스국가 무역우대 법안(Andean Trade Preference Act)



안데스 조약(볼리비아, 에쿠아도르, 콜롬비아, 페루 및 베네주엘라) 회원국들에게 통상 양허를 허용하는 법안이 올해 의회의 재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저개발 국가들에 섬유류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106차 의회에서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 및 아프리카에 대한 논쟁이 예견된다.

#### 4) 결론

부시행정부가 통상법의 지속적 강화를 모색하겠지만, 서방세계의 교역에 대한 관심 제고를 포함하여 교역확대에 대한 열정이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의 특징이 될 것이다.

의회와 관련 위원회들이 분명히 의회의 통상문제에 대한 주도권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특정 통상문제에 대한 미국정책의 궁극적 방향은 아직은 불확실하다.

## 6. 2001년 EU 통상환경 전망

### 1) 반덤핑 현황과 전망

#### 진행중인 케이스

- 3.5인치 Microdisk(한국, 홍콩)  
1999년말에 개시되어 현재 진

행중인 종료재심은 2001년 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 3.5인치 Microdisk(일본, 중국, 대만)

일몰재심은 2001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종판정이 2002년초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일몰재심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적정한 시간내에 처리되지 않는 추세이며 일부 재심의 경우 최종판정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팩스기기(중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2000년 7월에 조사개시된 팩스기기의 중간재심은 2001년 중에 최종판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심 결과발표는 2001년 9월경으로 예상된다.

- 칼라TV(터어키)

2000년 7월 터어키산 CTV에 대해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001년 9월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잠정판정은 2001년 4월중으로 예상된다.

- 칼라TV(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싱가포르, 태국)

2000년 4월에 조사개시된 중간+일몰재심은 2001년 중 판정이 날 예정이다.

- 소형 형광등(중국)

2000년 5월에 개시된 반덤핑조사는 2001년 중에 판정이 날 예정이다.

- Pet 필름(한국, 인도)

조사결과 2001년 2월에 잠정판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판정은 2001년 4월중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덤핑관세는 7~12%대로 예상이다.

2001년 신규/재심 조사개시 가능 품목

- 3.5인치 Microdisk(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상기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부과된 반덤핑관세는 2001년 4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종료 전 일몰재심(Sunset Review)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 전자렌지(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2001년 중 새로운 반덤핑 제소가능성이 상존한다.

제소여부와 대상국가는 관련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와 가격에 달려있다.

- CD-R

최근 루머에 의하면 2001년 중 CD-R에 대한 새로운 반덤핑 제소가 예상된다. 대상국가는 제소자에 의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대만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Xerox사가 어려운 재정문제를 들어 EC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과 관련하여 집행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 EURO貨

1999년 1월 1일부로 독일, 필란드, 오스트리아, 이태리,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 등 11개국이 참여하여 공식적으로 출범한 유로화는 2001년말에 출범 최종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로 지폐와 동전은 2002년 1월 1일부터 통용되며 이에 대한 준비작업은 2001년에도 계속될 예정. 영국은 추진중인 현 단계에서 유로화에 동참할 것을 확정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3) 경쟁법

집행위는 EC조약 Article 81과 82의 시행제도를 광범위하게 수정한 규정을 제안하였다.

Article 81은 EC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사이의 일련의 반경쟁협정 또는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Article 82는 개별시장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

가 반경쟁적인 수단으로 그 위치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 규정은 경쟁법 적용에 있어 EC 회원국의 관계당국과 법원에 상당히 큰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 동시에 EC 경쟁법은 더 많은 케이스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법시행이 각 회원국으로 분산됨에 따라 여러 케이스에서 일치하지 않는 법시행과 각 회원국 실정에 따라 경쟁법의 자국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집행위는 이러한 우려를 근거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EC 경쟁법 위반에 대한 부과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집행위 제안이 현단계에서 받아들여 질지는 명확하지 않다.

4) 폐전자제품처리 및 위험물질 사용제한 관련 법안

집행위는 지난해 폐전자제품처리, 위험물질사용제한 관련 지침(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서 심의중이며 2001년 중 채택 또는 개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식통에 의하면 2001년 중 관련지침이 채택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집행위에서는 빨라야 2002년말에야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관련 유사법안은 초안이 논의되었던 시점에서 법률로 채택될 때까지 5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서

법안에 대한 수정을 제기할 경우 추가적인 지연이 예상된다.

결국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서 제안된 수정안에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의견일치를 위한 특별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5) 일반특혜 관세제도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새로운 GSP규정이 2002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2001년 3월경 회원국들 에게 새로운 GSP 규정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이슈는 GSP 졸업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며 GSP하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 또는 분야는 더 이상 GSP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집행위는 GSP 졸업국가를 결정하는데 적용할 경제지표를 1995년 대신 1999년 또는 2000년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고려중이다. 그러나 GDP 관련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은행에서 2000년 지표를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EC는 1999년 지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금융위기 때문에 1999년 지표의 적용은 어떤 국가가 GSP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논의의 가능성이 있는 이슈는 과거 GSP에서 졸업했던 국가나 품목에 대해 GSP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시 혜택을 부여할지의 여부이다.

GSP 졸업제도의 개정은 2001년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현재 2002년 1월로 더 연기될 전망이다.

#### 6) WTO 각료회의

제4차 WTO 각료회의는 2001년말 Qatar의 수도 Doha에서 개최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2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시애틀 각료회담에서 논의가 중단된 후 포괄적인 뉴라운드 공식 출범에는 실패하였다. 2001년에는 WTO회원국들이 뉴라운드출범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EC는 뉴라운드 출범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무역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EC는 원칙적으로 협정이 무리없이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나 다른 WTO회원국(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의제로 채택코자한다면 협정의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EC는 경쟁법과 관련하여 WTO차원의 다자간 규범 제정에 대해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WTO 규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다자간 무역을 저해하는 세계시장 카르텔과 기타형태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였다.

다른 이슈들 중에서 EC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하의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범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규범은 강도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무역과 환경이슈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규범의 협의 또는 논의를 희망하고 있다.

#### 7)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제품의 교역확대를 위해 추진된 ITA위원회는 2000년 11월에 3단계로 구성된 ITA품목에 대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1년)을 승인하였다.

1단계에서는 2001년 3월까지 위원회가 ITA품목의 교역에 있어 장애요소로 회원국들이 제기한 비관세조치의 목록을 취합할 것이며 2단계에서는 위원국들이 ITA 교역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에 대한 경제적, 발전적 영향과 무역이익에 대해 검증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가 1, 2단계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3단계는 2001년 1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동 결정하에서 위원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기술 산업과 기타 관련 협의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IT산업 대표들은 많은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IT제품에 대한 장황한 테스트와 인증요구, 그

리고 수입허가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한 IT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음. 많은 위원국들이 ITA위원회에 IT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철폐에 따른 이익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IT제품에 적용될 기준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다.

ITA 위원국은 현재 54개국으로 IT제품의 세계교역에서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정은 2000년 1월 1일까지 IT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제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몇몇 품목과 관련하여 일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연장된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 8) 무역관련 지적소유권(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00년 TRIPs 회원국들의 입법 시행에 대한 검토는 2001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2000년에는 2000년말까지 TRIPs 입법시행 통보를 지연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2001년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많은 회원국들이 2000년 1월 1일 이전에 TRIPs 협정의 상당부분을 시행키위해 자국입법을 이행하였고 관련국가들은 아래와 같다.

-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Bahrain, Barbados, Belize, Bolivi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Cameroon, Chile, Colombia, Congo, Costa Rica, Cote d'Ivoire, Cuba, Cyprus,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gypt, El Salvador, Estonia, Fiji, Gabon, Ghana, Grenada, Guatemala, Guyana, Honduras, Hong Kong, China, India, Indonesia, Israel, Jamaica, Kenya, Korea, Kuwait, Macau, Malaysia, Malta, Mauritius, Mexico, Morocco, Namibia,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Qatar, Saint Lucia, Senegal, Singapore, Sri Lanka, St. Kitts and Nevis, St. Vincent and Grenadines, Suriname, Swaziland,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United Arab Emirates, Uruguay, Venezuela, Zimbabwe.

9) 전자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WTO 패널과 협의

EC는 한국을 포함한 8개 기타 WTO회원국들과 함께 일명 버드 법안(Byrd Amendment)에 대해 미국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동 법안은 반덤핑케이스에서 부과된 반덤핑관세를 제소자측인 미국업체에 배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계관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동 조치가 미국업체들이 지나치게 반덤핑제소를 남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제소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불공정하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격이며 외국 경쟁업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패널은 2001년 상반기 중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C 인도산 Cotton type bed linen의 반덤핑관세

동 케이스에 대한 상소기구(Appellate Body) 보고서가 2001년 1사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EC는 동 케이스에 대한 패널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특히 패널은 EC의 덤핑마진계산에 있어서의 "Zeroing" 관행이 반덤핑협정의 Article 2에 위배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약 패널의 조사결과가 확정되면 동 케이스는 WTO회원국들에 의해 시행되는 향후의 반덤핑 조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Zeroing" 관행은 인위적으로 덤핑마진을 상승시켜 높은 반덤핑관세부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비난을 받고 있다.